2020학년도 고3 4월 들샘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사회탐구 영역 •

정치와 법 정답

1	⑤	2	③	3	④	4	③	5	③
6	③	7	④	8	⑤	9	②	10	①
11	④	12	④	13	②	14	⑤	15	④
16	③	17	⑤	18	②	19	③	20	④

해 설

1.〔출제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갑은 국가 수준에서의 정치 과정만을 정치로 본다. 반면, 을은 국가 수준에서의 정치 과정뿐만 아니라 집단 내 갈등 해결도 정치로 본다.

〔해설〕 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주민 청문회를 정치로 보는 것은 을의 관점이다. ② 을의 관점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쉽다. ③ 자연 상태에서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갑의 관점이다. ④ 갑, 을의 관점 모두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정치로 본다. ⑤ 갑, 을의 관점 모두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집행을 정치로 본다.

2.〔출제의도〕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 이해

A는 법률의 형식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B는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해설〕 ① ㉠, ㉡은 모두 '예'로 서로 같다. ② A와 B는 모두 법적 절차의 준수를 강조한다. ③ B는 법률의 실질적인 정당성의 확보에 주목한다. ④ B와 달리 A는 헌법재판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⑤ A와 달리 B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만이 권위를 가진다고 본다.

3.〔출제의도〕 현대 민주 국가의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주체의 종합적 이해

㉠~㉣은 각각 시민단체, 정부, 이익 집단, 정당이다.

〔해설〕 ④ ㉣은 국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참여 주체는 맞으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는 아니다.

4.〔출제의도〕 기본권 이해

그림은 기본권을 질문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에 '예'라고 대답한 B는 자유권이다.

〔해설〕 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청구권의 실현 방안이다. ②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은 사회권과 참정권으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③ (가)에 '능동적 성격의 권리인가?'가 들어간다면 C는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정치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절하다. ④ A는 사회권으로 (가)에 '복지 국가와 밀접한 권리인가?'가 들어가는 경우 C에도 사회권이 들어가야 하므로 들어갈 수 없다. ⑤ (가)에 '국민 주권 주의 실현과 밀접한 권리인가?'가 들어간다면, C는 참정권이다. 영유아의 보육 지원은 사회권의 실현 방안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5.〔출제의도〕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 간 견제 이해

〔해설〕 ㄱ. D가 법률안 거부권이라면 A에 들어갈 것은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ㄴ. 갑은 정부, 병은 국회로 D는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은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적절하다. ㄷ. 국정 감사·조사권이 B에 들어간다면 E는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은 적절하다. ㄹ. C가 행정 재판권이라면 을은 정부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모두를 임명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6.〔출제의도〕 사회계약설 사상가의 입장 이해

갑은 홉스, 을은 루소, 병은 로크이다.

〔해설〕 ㄱ. 저항권을 주장한 학자는 로크이다. ㄴ. 합리적인 개인들이 계약하여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갑, 을, 병 모두의 입장이므로 B에 들어갈 수 없다.

7.〔출제의도〕 전형적인 정부 형태 파악+이해

표에서 '여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T기에서 '아니요'라고 답했으므로 T기를 통해 갑국이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갑국의 정부 형태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① 내각 불신임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②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③ 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은 각부의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④ ㉠에 '예'가 들어간다면 T기에는 여소야대, T+1기에는 여대야소가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 법률안 제정 가능성은 T+1기에서 높다. ⑤ ㉠에 '아니요'가 들어간다면 T기와 T+1기 모두 여소야대의 상황이다. 두 시기의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선지와 같이 판단할 수 없다.

8.〔출제의도〕 지방 자치 제도의 종합적 이해

㉠은 광역자치단체이고, ㉡은 기초자치단체이다.

〔해설〕 ㄱ. ㉠과 ㉡의 의회 모두 지역의 사정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ㄴ. ㉠과 ㉡의 의회 모두 지역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ㄷ. ㉠, ㉡ 모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두고 있다. ㄹ. ㉠은 광역자치단체로 ㉡외에도 다른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에 비해 ㉡은 집행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작다.

9.〔출제의도〕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이해

A는 헌법재판소에 공권력 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의 구제수단인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해설〕 ① 구치소장의 조치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당해 구제받고자 청구한 것으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③ 사례의 심판은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으로 재항고를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장의 금치 조치에 대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보았다. ⑤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장의 금치 조치에 대한 A의 헌법 소원을 인용하였으므로 구치소장의 금치 처분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0.〔출제의도〕 헌법의 기본원리 이해

다음의 법률이 공통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해설〕 ②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원리는 평화 통일의 지향이다. ③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국민 주권 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④ 절대적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생계 지원은 복지 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으로 볼 수 있다. 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의 헌법 조항은 국민 주권 주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11.〔출제의도〕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갑은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을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해설〕 ① 계몽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을의 관점이다. ②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이기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갑의 관점이다. ③ 갑의 관점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맞추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의 관점은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을의 관점은 국제사회에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2.〔출제의도〕 가족 관계의 종합적 이해

갑은 63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위 사례에서는 ㉠과 ㉡을 모두 고려하여 두 사람의 상속액의 합이 18억 원인 경우를 계산해야 한다.

〔문제해결〕

Ⅰ) 갑이 A를 인지하고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갑이 A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상속 대상은 을, 병, 정, A이며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63억 원을 상속받는다. 이때 병, 정, A는 14억 원을 동일하게 상속받고, 을은 21억 원을 상속받는다.

Ⅱ) 갑이 A를 인지하고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갑이 A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상속 대상은 을, 병, 정, A이며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31.5억 원을 상속받는다. 이때 병, 정, A는 7억 원을 동일하게 상속받고, 을은 10.5억 원을 상속받는다.

Ⅲ) 갑이 A를 인지하지 않았고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갑이 A를 인지하지 않았으므로 상속 대상은 을, 병, 정이며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63억 원을 상속받는다. 이때 병과 정은 18억 원을 동일하게 상속받고, 을은 27억 원을 상속받는다.

Ⅳ) 갑이 A를 인지하지 않았고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

갑이 A를 인지하지 않았으므로 상속 대상은 을, 병, 정이며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31.5억 원을 상속받는다. 이때 병과 정은 9억 원을 동일하게 상속받고, 을은 13.5억 원을 상속받는다.

따라서 두 사람의 상속액의 합이 18억 원인 경우는 Ⅳ)이다.

〔해설〕 ① 갑이 A를 인지하지 않았으므로, A는 상속받지 못한다. ② 병의 상속액은 9억 원이고, 을의 상속액은 13.5억 원, A의 상속액은 없으므로 병의 상속액보다 을과 A의 상속액의 합이 1.5배이다. ③ 병과 정의 상속액은 각각 9억 원으로 동일하다. ④ 정의 상속액은 9억 원, A의 상속액은 없으므로 두 사람의 상속액의 합은 9억 원이고 을의 상속액은 13.5억 원이다. 을의 상속액이 4.5억 원 더 크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존재하는 제도로 피상속인의 상속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이다. 유류분 제도는 법적 상속분의 최대 50%를 보장하는 제도로 위 사례의 경우 유언장의 형식이 유효하여 절반의 기부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상속되었으므로 을, 병, 정의 상속액의 50%가 모두 보장되었다. 따라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재단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13.〔출제의도〕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의 종합적 이해

〔해설〕 ①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는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신청으로 열리는 재판으로, 민사재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을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므로 (가)에는 '위법성이 조각됨'이 들어갈 수 있다. ③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관의 판결을 구속하지 않는다. ④ 병이 1심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 없다. ⑤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상 피해를 받은 주민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

갑은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을, 을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을 채택하였고, (가)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 (나)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해설] ①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은 을이다. ②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갑이다. ③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중시하는 정도가 큰 것은 갑이다. ④ 계약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도가 큰 것은 을이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현대사회에서 적용되는 민법의 기본 원리이다.

15. [출제의도] 국제기구의 의미와 특징 이해

A는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결기관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해설]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판결을 불복할 경우 판결을 강제 이행하도록 하는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16.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종합적 이해

[해설] ㄱ. 갑의 행위는 을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아 을에 대하여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을의 방화 행위에 더해 A가 소유한 주택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심각해졌으나, 공동으로 모의하여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므로 을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 A는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17.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A와 B 카드에 대한 질문의 답은 모두 O이다. 따라서, A, B 카드에 대한 질문에서 갑, 을, 병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각각 0점, 3점, 2점이다.

[해설] ① A와 B에서 획득하는 갑, 을, 병의 점수의 합은 5점이다. ② A, B 상황에 모두 옳은 답변을 한 사람은 을로, 갑과 을의 점수의 합은 9점이다. ③ A, B 상황 모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은 갑으로 이때의 을과 병의 점수는 각각 6점, 2점이다. 을의 점수는 병의 3배이다. ④ (가)에 '구매자의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들어간다면 갑과 병의 점수는 각각 3점, 2점이다. 병의 점수는 갑보다 낮다. ⑤ (가)에 '판매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가?'가 들어간다면 갑과 병의 점수는 각각 3점, 2점이다. 갑의 점수는 병보다 높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보장 이해

갑은 부당해고, 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해설] ② 을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의 여부를 다투는 소를 제소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의 투쟁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면 노동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형사 미성년자의 구분과 이해

갑은 9세로 보호처분과 형사 처벌 모두 받을 수 없다. 을은 12세로 형사 처벌은 받을 수 없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병은 15세로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받을 수 있다.

[해설] ①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병만 받을 수 있다. ②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병이다. ③ 병은 을과 달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다. 반면, 을은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④ 갑은 10세 미만이므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⑤ 갑, 을 모두 병과 달리 형사적 책임이 없다.

20. [출제의도] 선거의 종합적 이해

[문제해결]

A와 B는 보수성향 정당, C는 중도성향 정당, D와 E는 진보성향 정당이다.

Ⅰ) 현행의 정당별 상황을 파악한다.

선거구 1~9에서는 순서대로 A, C, C, D, (E, A), B, C, B, E 정당의 후보가 선출된다.

따라서, 의석률은 C가 30%, A, B, E가 20%, D가 10%로 B, C는 과대대표, A, D는 과소대표 되었다.

Ⅱ) 개편안을 적용한 정당별 상황을 파악한다.

선거구 4와 선거구 8이 통합되어야 하고, 선거구 5는 선거구 3, 6과 통합할 수 없으므로 선거구 1+2+5, 선거구 4+7+8, 선거구 3+6+9로 통합된다.

● 만약 선거구 4, 5, 8을 잇는 선거구를 만들 때, 선거구 7은 다른 선거구와 통합할 수 없으므로 선거구 4, 5, 8과 같은 형태로 통합할 수 없다.

1) 선거구 1+2+5

A당 130표, B당 20표, C당 110표, D당 10표, E당 130표로 A, C, E당의 후보가 선출된다.

2) 선거구 4+7+8

A당 30표, B당 70표, C당 90표, D당 100표, E당 10표로 B, C, D당의 후보가 선출된다.

3) 선거구 3+6+9

A당 50표, B당 80표, C당 70표, D당 40표, E당 60표로 B, C, E당의 후보가 선출된다.

4) 비례대표

총득표수가 270표로 가장 많은 C당이 비례대표 1석을 차지한다.

1)~4)를 종합하면 각 당의 의석률은 C당이 40%, B, E당이 20%, A, D당이 10%로 C당의 의석률은 증가하였고, A당의 의석률은 감소하였다. 나머지 정당의 의석률은 동일하다.

[해설] ① C당은 모두 현행에서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크므로 과대대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당은 현행에서 과소대표 되었다. ② D당과 E당 모두 의석률의 변화가 없고 의원 총수의 변화도 없으므로 선거제도 변경에 유불리가 없다. ③ 중도성향 정당의 의석률이 현행 30%에서 개편안 40%로 증가하였으므로 중도성향 국민의 의견 반영은 현행보다 유리하다. ④ 현행에서 개편안으로 선거제도가 변경될 때 보수성향 정당의 의석수는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드는 것과 달리, 진보성향 정당의 의석수는 3석으로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⑤ 갑국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다면 현행과 개편안 모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으므로 연립내각이 구성된다.